

# 大學定員 확대와 教育機會의 평등화

金 炳 聲

(韓國敎員大·敎育學)

지난 '80년대 초의 大學定員 擴大는 고등교육 기회 분배에서 階層·地域·性差에 따른 不平等을 축소해 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아직도 構造化된 근원적 불평등 해소에 있어서는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문제는 教育機會의 均等이 敎育結果, 즉 사회적·직업적 성취의 균등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敎育결과의 平等化를 위한 大學定員 政策은 어떤 準據와 可能性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하는가?

## 1. 序 : 問題

'60년대를 기점으로 經濟開發 政策에 따른 선진 산업사회의 敎育改革의 동향은 우리 사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교육기회의 확대가 국가발전 및 사회적 평등 실현에 이바지한다는 國家發展論의 견해와 교육을 통하여 소득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추구하려는 일반 국민들의 욕구가 이른바 중등교육의 普遍化·고등교육의 大衆化 시대를 물고 온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교육을 사회적 지위 상승의 通路로 보는, 즉 업적주의(meritocracy)에 기초한 성취지향의 통념을 갖게 되었으며, 과도할 정도의 敎育熱을 보여 오게 되

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선진 西歐社會와는 달리 사회구조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급변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개인의 社會的·職業的 地位에 주는 효과에 대하여는 樂觀論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다.<sup>1)</sup> 이러한 추세에 따라 지난 20년간 고등학교 졸업자는 529% 증가했고, 대입학력고사 지원자수는 808% 증가하게 되었다.

고등교육에 대한 폭발적인 社會的 需要는 정부의 大學 定員政策에 따라 시기마다 달리 충족되어 왔다. 해방후 '60년대까지는 자유방임기, '70년대 초까지는 정원억제기, '80년까지는 부분적 정원확대기, 그리고 '80년대 초까지는 급격한 정원확대기로 이행해 왔다.

1) 김병성, "고학력 사회의 문제와 학력간 균형발전의 과제", 『교수논총』, 제 5집 제 2호(1989.12), 한국교원대학교, p.19.

1961~1972년 사이에 정원억제 정책을 실시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전의 私學의 무분별한 난립과 대학정원의 팽창으로 고급인력의 공급 과잉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70년대 후반의 부분적 정원 확대도 産業構造의 변화로 人力需要 변화를 반영한 정책으로서, 重化學 공업 분야의 人力充員과 무역구조의 對外指向性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6·25 동란 직후 출생한 세대가 대학에 입학하기 시작한 1970년대 중엽부터 대학입학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따라서 '70년대 말부터 대학정원은 크게 늘리기 시작하여 1981년부터는 졸업정원제 아래 定員을 급격히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분적 확대기의 定員 확대가 사회적 수요와 경제적 수요가 맞물리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반면에, 이 시기의 급격한 정원 확대는 국가의 人力需要를 완전히 도외시킨 채 추진되었다.<sup>2)</sup>

'8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우리 경제가 침체를 맞이하여 대졸자의 실업률이 급증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대학정원 확대정책의 실시는 정부가 노동시장의 수요보다 사회적 수요의 해결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간의 대학 정원정책의 변화 추이를 종합해 볼 때, 經濟的 수요가 社會的 수요와 크게 불일치하지 않는 한 경제적 수요가 고등교육 팽창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두 수요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때에는 사회적 수요의 비중이 더욱 크게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확대가 국가발전 및 사회·경제적 平等化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대학정원을 확대하여 왔으나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는 이에 훨씬 못미쳐, 최근 들어 대학졸업자 중 미취업자가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문제는 이 사회적 수요 가운데 “과연 누구의 수요가 충족되어 왔는가”이다.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교육기회가 階層的

으로 보다 평등하게 분배되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교육기회의 不平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전자의 주장은 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교육기회의 平等化가 실현되었다는 平等論의 견해이고, 후자는 교육기회의 量的擴大가 이루어졌다 해도 그것은 계층 간에 불평등하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교육기회의 不平等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대학정원 확대의 실제적 문제를 살펴보고, 대학정원의 확대 및 억제에 따른 계층배경과 지역간 혜택 및 平等化의 有無를 검토하여 고등교육의 質 계고를 위한 平等化의 方向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大學定員의 擴大와 不平等 問題

1980년에 시행된 7·30 교육개혁 조치는 우리의 고등교육 기회확대에 획기적인 전환기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대학정원의 확대는 물론 중대의 入學定員制를 卒業定員制로 바꾸어 추가로 30%의 학생을 더 선발하게 함으로써 대학정원은 지금까지 10만 명 이내에서 20만 명선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입학정원의 확대와 입시제도의 개편이 고등교육 기회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 오게 된 것이다. '70년대까지는 대학정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지속하였기 때문에 고등교육 기회도 크게 확대되지 않았으며, 교육기회에서의 계층간·지역간 불평등 현상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7·30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 1981년에는 대학입학 정원이 20만 5천 명에서 30만 5천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정책에 따라 전체 대학생 수는 1980년에 61만 여 명에서 1990년에는 149만 여 명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고등교육 기회는 괄목할 만큼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학정원의 대폭적인 확대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의 平等한 配分에는 어떠

2) 김영화, “고등교육 팽창의 결과 : 고등교육기회 획득에 미치는 출신배경의 영향추이(1967~1984)”, 『교육학 연구』, 제 28권 3호(1990), p. 66.

한 변화가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자료를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최근에 수행된 몇 편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기회의 확대와 관련하여 볼 때 대학정원의 확대는 中下層 자녀의 교육기회를 다소 확대시켜 주고 있으나 교육기회의 階層間 不平等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sup>3)</sup>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70년대의 대학정원 억제정책은 교육의 地域間 不均衡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또 '70년대의 대학교육 기회의 配分에 관한 연구에서는 계층간 불균형을 지적하고 있다.<sup>4)</sup> 최근의 연구에서도 고등교육 기회의 배분에 있어서 地域間 격차는 점차 감소되었지만, 階層別 격차는 그다지 均等化되지 않았다고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교육기회의 확대에 따라 그 배분에 있어서 계층간·지역간 불평등 정도는 과거에 비하여 다소 해소되었지만 근원적인 불평등 자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서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교육기회가 확대된 시기에 地方出身, 농업중사자 출신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공통적으로 出身背景에 의하여 대학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5)</sup> 또 18개 대학 신입생 실태자료를 통해 교육기회의 계층별 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근로계층, 도시 하류계층 그리고 농·어업 등 하류계층의 대학교육 기회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sup>6)</sup>

다른 한편, 교육기회가 확대된 상황에서도 교육기회의 분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기회의 分配構造가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대학의 斷層化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不平等 構造가 형성되는 데 있다. 즉, 대학교

육의 확대와 함께 中上層이 다니는 대학과 中下層이 다니는 대학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러한 斷層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 이점에 관하여 한국에서 대학 간의 단층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에 현저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sup>7)</sup> 따라서 대학의 정원확대와 관련하여 교육기회의 배분구조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려면 대학유형은 물론 그 時系列的 변화 과정도 함께 알아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학정원의 확대정책이 얼마나 교육기회의 평등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 10년간 대학정원의 변화 추이에 따라 정원확대기('79~'84)와 정원억제기('85년 이후)로 구분하여 고등교육 기회 배분에서의 平等化 가능성을 학생배경의 특성, 지역간 격차, 남·여 비율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3. 階層 및 地域背景과 教育隔差

대학 입학생의 가정계층 배경(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거주지역 등)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 배분의 격차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대학의 교육기회가 확대되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반에는 교육기회의 계층별 배분에서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의 교육기회가 확대되면서 中下層의 교육기회가 다소나마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중상층보다 중하층의 교육기회가 더 큰 비율로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의 교육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되면서 교육기회의 배분에 있어서는 계층 간의 隔差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

3) 한만길, “대학정원의 확대 이후 교육기회 배분구조의 변화 추이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 1권 2호 (1991), p.125.

4) 김영모, “한국사회의 교육기회에 대한 사회계층적 분석”, 『진단학보』, 제 35호 (1975).

5) 김영화, “전계 논문”.

6) 정영애,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 문교부 자유공모 연구과제, 1987.

7) 한만길, “대학신입생의 출신배경에 있어서 대학의 소재지역간 격차에 관한 논의”, 『한국교육』, 제 18권 (1991).

구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배분에 있어서도 계층간의 不平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유리한' 가정배경 출신자와 '불리한' 가정배경 출신자가 얻게 되는 고등교육 기회에서의 絶對的 격차는 감소되는 경향이 있지만, 유리한 계층 배경 출신자의 相對的 혜택은 지속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근로계층과 도시 하류 계층에 대한 중·상계층)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교육기회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대학간 分化現象이 야기되어 소위 중산층이 들어가는 上位 수준의 대학과 중하층이 들어가는 下位 수준의 대학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時系列的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의 정원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저학력자 및 중하층 배경의 출신자가 증가되면서 고학력자와 중상층 배경 출신자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많았다. 대학정원 확대기인 '80년대 전반기까지는 국졸 이하의 저학력 배경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서울과 대도시에서 두드러졌고, 도시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직업적 배경에서도 정원확대기에는 중상층이 감소하고 중하층이 증가하는 추세였다. 특히 농·어업 배경 출신자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정원확대기에는 교육기회의 量的 확대와 함께 教育機會의 배분이 다소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정원이 억제되는 시기에 있어서 교육기회의 배분은 다시 불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정원억제기에는 高學歷者 및 중상층 배경 출신자가 증가하는 반면, 저학력자 및 중하층 배경 출신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다. 직업의 종류에 있어서는 농·어업과 하위직의 중하층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대학의 자료와 지역별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직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으

나, 5년 정도의 기간에 職業構造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미루어 보면 교육기회의 배분 구조에 의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 기회 분배의 불평등 문제는 外國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기회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층간 분배 형태는 여전히 不平等하다는 주장이다. Sewell(1971)은 미국의 경우, 상위계층 배경 고등학생의 大學進學 가능성은 하류계층 학생에 비하여 4배 정도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영국의 경우도 대학교육 기회 획득에 있어서 계층간 불평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sup>8)</sup> 지난 30년 사이에 大學學歷 消費者는 상류층이 7.2%에서 26.4%로 증가한 반면, 노동자 계층은 0.9%에서 3.5%로 다소 증가하였을 뿐이다. 이 시기에 대학 입학자는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 기회의 絶對的 격차는 확대되었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도 지난 20년 동안 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지만,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결코 감소되지 않았다고 한다.<sup>9)</sup> 프랑스의 경우 농민과 여성의 교육기회는 확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70년대 말과 '80년대 초를 경과하면서 교육기회는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그 계층배경별 교육기회의 격차에 대하여는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을 볼 때 계층간·지역간 相對的인 격차는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중상층 또는 중산계층 출신이 하류계층·농업 중산자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대학진학률에서도 중상층 배경자가 다른 하위계층 배경자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고 하겠다. 즉, 고등교육 기회에서의 계층간 不平等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교육기회가 양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교육기회의 分配構造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대학교육이 확대되어 대학의 斷層化

8) Halsey, A.H. et al. (eds.), *Origins and destinations: Family, class, and education in modern Britain* (Oxford: Clarendon Press, 1980).

9) Garner, M.A. and Raffalovich, L.E., "The Evolution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France", *Sociology of Education*, Vol.57, January 1984.

現象이 생겨 새로운 형태의 敎育 不平等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80년대 초기의 대학정원 확대정책이 주로 지역적 均衡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교육기회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학교육 기회의 배분에 있어서 대학의 所在地域間 격차는 지난 10년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學歷背景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는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서울은 대도시 및 도시에 비하여 고학력자와 중상층 배경 출신자가 현저하게 많으며, 이런 경향은 '80년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한만길(1991)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대학 입학자의 父母學歷 배경에 있어서 1981년에 서울 43%, 대도시 17%, 도시 18%였던 것이 1990년 현재에는 서울 44%, 대도시 29%, 도시 21%의 차이로 지역간 격차는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 부모의 직업배경에 있어서도 지역간 격차는 다소 감소되었지만 격차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상에서 볼 때, 정원확대기에는 중하층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서 중하층의 교육기회 확대는 대부분 도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新生大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 소재 대학은 중상층 이상이 여전히 더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4. 入試競爭과 大學 定員政策

대학교육이 大衆化되고 있는 추세에서 대학입학 지원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입시경쟁은 量的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대학 학력을 얻어야만 취업과 지위를 위한 경쟁대열에 끼고 사회적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떤 대학이든 대학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입학 경쟁뿐만 아니라 보다 名望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의 심도가 더 고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의 입시경쟁은 양적·질적으로 심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대학진학 기회에서 계층간·지역간 격차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定員政策은 어떤 관점에서 수립되고 변화되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예컨대 大學定員에 제한이 없어진다면 계층배경(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학력 등)과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는 해소될 것인가? 또 지금과 같은 치열하고 살벌한 입시경쟁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처럼 중요한 국가정책적 과업은 단순한 평등원칙에 의한 論理的 분배보다는 就業構造에 대한 경제학적 메커니즘, 즉 학력과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균형을 연계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잠시 Thurow(1975)의 연구모형을 참조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sup>10)</sup> 그는 勞働市場을 분석하기 위하여 賃金경쟁 모형(wage competition model)과 職位경쟁 모형(job competition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모델이 우리의 대학 정원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임금경쟁 모형의 주요 가정은 취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사용할 지식, 기술을 학교나 훈련기관에서 이미 익히고 취업하는 경우이고, 반면에 적위경쟁 모형에 따르면 취업자들은 學歷 졸업장에 따라 직장에 들어와 승진 때마다 현직훈련을 통하여 필요한 직업적 지식, 기술을 용이하게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는 고용주가 요구하는 지식, 기술을 학교에서 적절하게 배워 온 노동자를 채용한다. 후자는 가능한 학벌이 높은 졸업자를 채용하여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을 쉽고 저렴한 경비로 가르치려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學歷上昇이 지나치게 일어나게 되면 취업시장에는 고학력자가 과잉 공급되게 된다. 고학력자 가운데는 不完全雇傭이 되는 현상이 야기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학력투자의 임금 回收率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대학 진학자 數가 감소하면, 대졸자가 노동시장에 적게 공급되고 대졸자의 불완전고용이 줄어들어 임금도 높아지게 된다. Freeman.

10) Thurow, L.C., *Generating in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1975).

(1976)은 고학력자들이 불완전고용에 시달리는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교육투자 회수율은 원상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교육투자의 임금 회수율이 떨어지면 대학 진학자들이 機會費用<sup>11)</sup>에 점점 더 유의하게 되고 대학진학의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이다.<sup>12)</sup> Freeman의 논리에 따르면, 임금경쟁 모형에서는 학력경쟁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고학력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시장경제 매커니즘이 自動調節 機能을 수행하여 학력경쟁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에 고학력자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교육투자의 임금 회수율이 증가되므로 일정 수준의 학력경쟁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 다시 말해서, 임금경쟁 모형에 터하면 대학정원의 제한이 철폐되어 입학정원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하여도 시장경제의 자동조절 기능을 통해 취업시장에 필요한 만큼의 대학생 數를 알맞게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대학정책이 직위경쟁 모형에 따른다면 대학진학 희망자는 끝없이 늘어날 것이고 학력경쟁은 끝없이 벌어질 것이다. 직위경쟁 모형에서는 직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을 쉽게 그리고 싼 비용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학교 졸업장을 취업과 승진을 위한 選拔道具의 하나로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교육투자율이 떨어져도 학력경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대학진학자가 많아져서 과거에는 고졸자가 갖던 직업을 대졸자가 갖게 되어도 고등교육의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된다.<sup>13)</sup>

## 5. 結言 : 高等教育의 質

우리 사회의 지나친 學歷競爭과 그에 따른 入試競爭은 쉽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일반인은 學校教育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공헌한다는 神話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두 모형에 터하여 우리 고등교육의 입시경쟁을 축

소시키고 대학정원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결과적으로 대학교육의 質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배적 노동시장 類型이 임금경쟁 모형에 따른다면,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경쟁은 학생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아직도 대학교육 투자 회수율이 機會費用을 앞질러 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정원을 늘렸다 할지라도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매커니즘이 大學定員을 축소시켜 균형점을 찾게 해줄 것이다. 대학 정원정책을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시장경제의 수요·공급 기능에 맡겨 버리는 것이 입시경쟁의 가열화를 늦추는 이상적인 해결책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賃金경쟁 모형에 따르면, 현재의 대학정원 규모를 확대시키는 정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책은 임금의 불평등 정도를 축소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학력이 상승하면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生産性이 높고, 그 결과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 또 학력상승으로 인하여 대졸자가 늘어나므로 고급 기술자의 공급이 늘게 되고, 공급증가에 따라 대졸자의 임금은 낮아진다. 그 결과 사회의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임금의 분배는 더욱 평등해질 수 있다.

임금경쟁 모형에서는 학교교육의 質, 즉 무엇을 얼마나 잘 그리고 많이 배웠는가에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임금은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고 학교에서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생산성이 높아져 임금도 오르고 승진도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일반의 주 관심이 질 좋은 고등교육을 받으려 하는 데 있으므로, 入試方式도 질 높은 교육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制度的 改革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에컨대 입시문제를 고등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主觀式 또는 論述型 문제로 출제할 때, 입시생들이 질 높은 思考를 기르

11) 기회비용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진학 대신 노동시장에 진출하여(대학 재학기간 동안)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한다.

12) Freeman, R., *The over-educated America*(New York : Academic Press, 1976).

13) 이미나, "입시경쟁의 유형면에서 본 입시경쟁의 다이내믹스", 『한국사회와 교육활동』, 한국교육학회 교육사회학연구회 편, 1991.

러는 욕구와 입시경쟁에서 이기려는 욕구가 포함되어 교육의 방향 자체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간 우리 고등교육의 階層間·地域間·性別 차이에 따른 불평등·불균등 구조가 점차 축소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아직도 구조화된 근원적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이 敎育結果(사회진출, 생산성, 임금 등)의 균등을 보장 못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평등화에 따른 교육의 質 제고가 시급하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특히 학교 자체의 노력, 즉 교육과정 개선, 교수요원 확충, 자율적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개선은 물론이고 國家的 敎育投資 政策도 중요하다.

그간 서울지역의 대학 증설보다는 지방의 대학

을 증점 증설해 온 것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의 결실이다. 반면 정부의 교육비 투자는 영세한 수준에 머물면서 私부담으로 교육비를 충당하도록 해온 국가의 교육제정 정책은 대학교육의 기회 획득에 가정배경에 의한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유럽사회처럼 등록금, 책 구입비,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나 貸與 장학금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비의 높은 私부담률은 저소득 가정 출신이 대학에 진학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게 한다. 따라서 이처럼 불리한 배경 출신자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制度化하지 않은 채 수익자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은 교육기회 배분의 不平等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政策的 노력과 入試制 개선을 통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은 물론 이에 따른 교육의 결과, 즉 교육의 質, 더 나아가 노동시장에서의 生産性 向上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